

## 피랍 500일, 제미니호 사건을 통해 본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수열

### <요약>

- 지난 해 4월에 피랍된 제미니호의 한국 선원 4명이 2012년 10월 19일 현재 539일째 억류되어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사망한 해적들에 대한 보상금과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공격적인 군사작전이 한국인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 해적 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군 파병을 통한 해적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다. 다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통해 해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선원들이 해적의 표적이 되고, 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부르고 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
- 소말리아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을 도우면서 소말리아의 안정을 파괴해 소말리아를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들고 있다.
-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해역보다 일찍 심각한 해적 문제에 직면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국제해사기구가 제안하는 '해적 행위 예방 및 억제 지침'에 따라 선사와 선박들이 미리 대비한다면 상당부분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은 결코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점점 더 깊숙이 말려들 뿐이다. 소말리아 파병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 1. 제미니호 피랍 사건 개요

[표 1] 제미니호 피랍 사건 개요

일시	내용
2011.4.30.	선원 25명(한국인 4명 포함) 탑승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제미니호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
2011.7.15.	소말리아 해적,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망한 해적 8명 몸값과 당시 생포된 해적 석방 요구
2011.11.29	싱가포르 선사가 해적들에게 협상금 지급.
2011.11.30	제미니호 및 선원 21명 석방. 한국 선원 4명만 모두 소말리아 내륙으로 데려감.

# 2. 한국군의 소말리아 파병 현황

- 한국 국군은 2009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의안번호 1803623)에 따라 2009년 3월 13일 1진(문무대왕 함) 출항, 2009년 4월 14일 아덴만 도착, 임무 시작 이후 6개월을 교대주기로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파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 국군의 소말리아 지역 파병은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뉜다.
- 부대단위로는 2012년 8월 13일 현재 LYNK 헬기 1대와 고속단정 3정을 탑재한 4,500t 급 구축함 1척과 313명(승조원, 해군 항공요원, 검문검색팀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일대(아라비아해 국제권고 통항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 개인단위로는 CJTF-HOA(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에 5명(협조장교, 참모장교)이 파병되어 지부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 지부티는 프랑스령에 속해 있다 1977년 독립한 국가로, 소말리아의 북서쪽 국경에 접해 있다. 소말리아와는 다른 국가지만, 소말리아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CJTF-HOA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소말리아 파병으로 볼 수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에도 CJTF-HOA 파병을 소말리아 지역 파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 소말리아 파병 현황(2012.8.13. 현재)

구분	부대	현재인원	지역	최초파병	교대주기
부대단위	청해부대	313	소말리아 해역	'09.3.	6개월
개인단위	CJTF-HOA	협조장교 4	지부티	'09.3.	6개월
		참모장교 1		'03.2.	6개월
총계		318			

※ 출처: 국방부,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2012.9.1.기준)」, 2012.9.3.

### 3.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 3-1. 해군 파병은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 국방부는 홈페이지 ‘부대단위 평화유지활동’에서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2009년 12월 현재까지 한국 선박은 단 한건의 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2009년에만 해당하며, 청해부대가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 해적의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소말리아 해적을 막기 위해 순찰해야 하는 범위만 해도 아덴만, 오만만, 아라비아해, 홍해, 인도양 등 매우 넓다. 그러나 군함의 보통 항해속도는 30노트 정도로, 시속으로는 약 55km 정도에 불과하다. 직접 호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적의 나포 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도중에 저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표 3] 한국 선원 승선 선박의 소말리아 피랍 현황

피랍일	선박명(한국인)	국적(선종)	피해내역
2006.4.4	동원호 (8명)	한국 (어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117일 만에 석방
2007.5.15	마부노 1,2호 (4명)	탄자니아 (어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173일 만에 석방
2007.10.28	골든노리호 (2명)	파나마 (화물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1명은 당일 탈출, 1명은 45일 만에 석방
2008.9.10	브라이트 루비호 (8명)	한국 (벌크선)	아덴만에서 피랍, 37일 만에 석방
2008.11.15	캠스타 비너스호 (5명)	파나마 (화물선)	아덴만에서 피랍, 88일 만에 석방
2010.4.4	삼호드림호 (5명)	마셜군도 (유조선)	인도양에서 피랍, 217일 만에 석방
2010.10.8	금미305호 (2명)	케냐 (어선)	케냐의 라무 10마일 해상에서 피랍, 124일 만에 석방
2011.1.15	삼호주얼리호 (8명)	몰타 (화물선)	아라비아해 연안에서 피랍,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6일 만에 구출
2011.4.30	제미니호 (4명)	싱가포르 (화물선)	케냐 몸바사 남동쪽 193마일 해상에서 피랍, 11월 30일 선원 21명 석방, 한국인 선장 1명과 선원 3명만 2012년 10월 19일 현재 539일째 억류 중

##### ○ 해군의 공격적인 군사 작전이 오히려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 2011년 4월 30일 싱가포르 선박 제미니호는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항으로 향하던 중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납치되었다. 선박회사 ‘글로벌리십’의 협상을 통해 11월 30일 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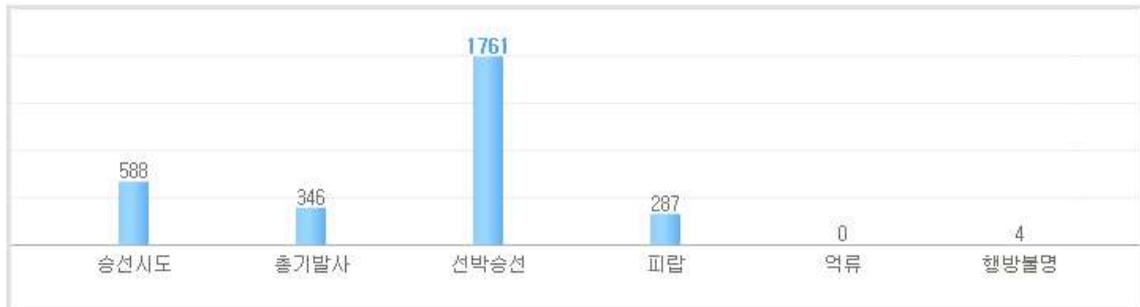
들(인도네시아인 13명, 중국인 5명, 미얀마인 3명)이 풀려났지만, 한국인 4명만 풀려나지 못했다. 한국 언론의 확인 결과 선원 1명은 수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의 건강 상태도 매우 악화된 상황으로 추정된다.

- 외교통상부는 해적들이 한국인 인질을 잡고,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한국에 붙잡혀간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석방과 사상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같이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한국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 해군의 강력한 대응은 해적 행위의 리스크를 높인다. 이런 상황은 해적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인질의 몸값을 키우게 되고 협상은 더욱 어려워져 인질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 당장의 해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선박의 자체 대비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최근 10년 간 발생한 해적의 공격 유형을 보면 선박승선(58.98%)이 압도적으로 많고, 승선 시도(19.69%), 총기발사(11.59%), 피랍(9.61%) 등의 순이다.

[그림 1] 최근 10년 간 해적의 공격 유형



※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해적 피해 유형에서 알 수 있듯, 승선 저지가 해적 피해를 줄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이는 해군 함정의 호송 임무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는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의 예방 및 억제에 관한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선장 및 선원을 위한 지침서」를 통해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침서’는 해적우범해역에서의 해적피해 방지대책, 해적에 대비한 상황별 대비 전략을 밝히고 있다. ‘대응요령’은 ‘해적의 조기발견이 해적에 대한 최우선의 방어책’이라며, 미리 해적선을 발견하면 너울 및 파도를 일으키는 회피조션으로 해적들의 승선 시도를 억제하는 방법이나, 해적이 습격을 감행할 때의 대응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해적들의 공격은 새벽 1-6시 사이, 선원들이 잠들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MSC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적 및 무장강도 대응요령」에서와 같이 이러한 시간대에 선교에서 선박의 접근 여부 감시, 선수 및 선미에 추가감시요원 배치, 탐조등 사용, 선박 접근 경로 차단 등의 대응을 통해 해적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4월 20일 피랍 위기를 모면한 한진텐진호의 사례는 이러한 대응 요령에 따라 해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에서 싱가포르로 운항하던 중 20일 밤 소말리아 동쪽 740km 지점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은 한진텐진호는 재빨리 경보를 울리고 선원 전원이 비상대피시설(시타델)로 대피해 피랍 위기를 모면했다. 비상대피시설은 13mm 이상의 두꺼운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내부에 비상식량과 구급약품, 통신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승선 1주일 전에 연습한 매뉴얼대로 대피한 한진텐진호 선원들은 아무런 피해없이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

- 한국 선박과 한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 파병보다는 국가가 선주 및 선원들이 해적 대응지침 숙달과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3-2. 해군 파병으로 해적을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 미국을 비롯해 소말리아에 파병하고 있는 나라들은 해군력을 이용한 강력한 해적 단속 활동으로 소말리아 지역의 해적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세계 20여 개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집중된 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피해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9년 세계 각국의 해군 파병 이후 해적 발생이 감소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 2012년 1/4분기에 발생한 해적 피해 건수만도 64건으로, 최근 해적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더구나 바람과 파도가 잦아드는 9-10월에 해적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표 4] 최근 10년간 지역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 현황(2012.4.1 기준)

지역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4.1	합계
동남아	170	158	102	83	70	53	71	70	41	24	842
극동	19	15	20	5	10	11	0	44	15	3	142
인도	87	32	36	53	30	23	27	28	9	6	331
<b>아프리카</b>	<b>93</b>	<b>73</b>	<b>80</b>	<b>61</b>	<b>120</b>	<b>189</b>	<b>268</b>	<b>259</b>	<b>191</b>	<b>64</b>	<b>1,398</b>
기타	4	6	13	8	12	2	4	4	1	0	54
미상	0	0	0	6	0	0	0	0	0	0	6

※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군대의 개입이 아니라 정치안정화가 필요하다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아프리카 지역보다 해적 문제가 훨씬 심각했던 동남아시아 지역([표 4] 참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경찰 차원의 국제 공조와 연안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화 등이 그 배경으로 평가된다. 이는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2005년 해적 공격(미수 포함)이 79회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리주의 운동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해적 발생 건수를 줄인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군도 내외에서 일어난 공격들은 종종 분리주의 운동 그룹의 행위였는데, 평화협정 체결로 이들이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 한편 인도네시아는 해적 행위와 테러리즘을 연결해 해양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태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어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 자원을 파괴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환경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Catherine Zara Raymond, 『Piracy in the Waters of Southeast Asia』, 『Maritime Security in Southeast Asia』)
- 상승세를 유지하던 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발생 건수가 2006년 주춤했던 것 역시 소말리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크게 작용했던 결과다.
- 소말리아의 이슬람법정연맹(Islamic Courts Union)이 2006년 6월 군벌을 몰아내고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하면서 내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도 주춤했다. 도둑질을 큰 범죄로 여기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법정연맹은 자체 해상경비대를 구성해 해적 근거지를 소탕하기 시작했다. 모가디슈에서 약 500km 떨어진 하라데레를 비롯 삼호 드림호가 피랍되어있던 호비요 등 동부 해안가 일대 해적들의 전초기지를 장악해나갔다.
  - \* 2006년 이슬람법정연맹의 대표 셰이크 하산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적질도 이슬람이 범죄로 금지하기 때문에 소말리아 땅에서 모두 몰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그러던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공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물거품이 되었고, 2008년 해적 행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적 문제가 국가의 정치적 안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5] 지역별 해적발생 건수(미수 포함)

해역	'96	'97	'98	'99	'00	'01	'02	합계
<b>동남아시아</b>	<b>124</b>	<b>92</b>	<b>89</b>	<b>161</b>	<b>242</b>	<b>153</b>	<b>153</b>	<b>1,014</b>
극동	17	19	10	6	20	18	17	107
인도양	24	37	22	45	93	53	52	326
중남미	32	37	35	28	39	21	65	257
<b>아프리카</b>	<b>25</b>	<b>46</b>	<b>41</b>	<b>55</b>	<b>68</b>	<b>85</b>	<b>78</b>	<b>398</b>
기타	6	17	4	5	7	5	5	49
미상	0	0	1	0	0	0	0	1
전체	228	248	202	300	469	335	370	2,152

※ 출처: 정대율,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IMO 및 우리 정부의 노력」

○ 소말리아 국가 경제가 해적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에 의한 해적 소탕은 불가능하다

- UN 소말리아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흐마드 소말리아 대통령이 직접 해적 우두머리인 모하메드 아프웨인에게 외교 여권을 발급해줬다고 한다. 외교 여권을 발급해줬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체포되지 않을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 \* 아프웨인은 해적의 본거지 하라데레에서 해적들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로, 잇단 선박 납치 사건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6년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원호 납치뿐 아니라 이후 한국 선박들의 납치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소말리아 언론인 무스타파 하지는 “소말리아 정부가 해적과 연계돼 있는 것은 그들이 납치로 벌어들인 현금 때문”이며, “소말리아 정부의 돈줄은 오직 해적과 해외 원조금뿐”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제 원조금이 크게 줄면서 소말리아 정부의 해적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되었고, 인질 한 명의 평균 몸값이 소 1,650마리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해안선이 3,000km에 달하는 소말리아는 풍부한 어장을 갖췄고, 고기잡이가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나 내전으로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외국의 거대한 쌍끌이 선박들이 매년 3억 달러 이상의 해상 생물들을 싹쓸이 해갔다. 또한 불법 폐기물 투기도 계속됐다. 2005년에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자 버려지고 파괴된 수백 개의 드럼통이 해변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 질병으로 사망했다.  
\* UN의 소말리아 특사 아흐메두 아브달라는 “누군가 여기에 핵 물질을 버리고 있다.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도 있다”라고 말했다.
- 외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과 폐기물 투기로 생계 수단을 빼앗기고 질병에 고통 받는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해적 행위는 거의 유일하게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이다. 현실에 대한 절망, 외국에 대한 적개심 속에 소말리아 사람들은 오늘도 해적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 이러한 현실 조건이 현재 산업화된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지만, 군사 작전을 통한 해적 소탕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 3-3. 소말리아 파병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일환이다

#### ○ 소말리아 파병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다

-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13240)을 제출하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중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처음으로 제시할 정도로 한국은 소말리아 파병을 통해 대테러 전쟁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 정부는 소말리아 지역 파견부대의 임무를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 지원,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로 제시했다.
- 상기 동의안에서 정부는 파병 연장의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73, 1838, 1846, 1851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73호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8일에 테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결정한 결의안으로, 소말리아 파병이 대테러 전쟁의 일부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군 제독이 2010년 4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CTF-151(Combined Maritime Forces’ Combined Task Force 151)의 지휘관을 역임했다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CTF-151이 소속된 연합해군은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항구적 자유 작전’(대테러 전쟁을 통칭하는 작전명)을 해상에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10월 구성되었다. 연합해군은 이 중 ‘아프리카의 별 작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적퇴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불법무기 차단, 테러 근절이 주요 임무다. CTF-151 창설로 해적퇴치 임무를 이양한 CTF-150은 지금도 CTF-151과 동일한 지역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 대테러 전쟁은 소말리아 안정의 기회를 파괴했다

-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소말리아를 주시해왔다. ‘장기간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소말리아로 흘러들었다거나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과 헤즈볼라가 연계되어 있다’, ‘이란 정부가 소말리아의 이슬람법정연맹을 지원한다’는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 미국 부시 대통령은 “소말리아가 알카에다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슬람법정연맹이 모가디슈를 장악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소말리아에 이웃한 에티오피아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켰다.
-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 이후 미국은 이후 미국은 보다 직접적으로 소말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 다섯 번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 2007년 1월에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요에 대대적인 공습작전을 벌이면서 미군 당국은 알카에다 지도부 3인방을 겨냥한 작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소말리아로 확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 ○ 미국은 소말리아를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들고 있다

- 대테러 전쟁의 확대는 2006년 소말리아 정국 안정을 수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소말리아 안정의 기회를 파괴했다.
- 2008년 5월 1일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소말리아 다사마렙 지역에 크루즈 미사일을 퍼부었다.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이 공격으로 30여 명의 소말리아인이 사망했다. 이 중에는 이슬람법정연맹의 소장파 그룹이 분화해 나온 ‘알 샤바브’(아랍어로 ‘젊은이’이라는 뜻)의 전 간부인 에이든 하시 이로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알 샤바브는 미국 정부의 테러조직 명단에 올라있는데, 미국은 공격 후 원래 목표로 했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평화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다. 알 샤바브가 보복 의지를 천명하면서 알 샤바브와 정부군, 에티오피아군은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이어 갔다.
-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2008년 4월 펴낸 보고서는 ‘소말리아 이슬람주의 진영은 에티오피아의 침공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2006년 말에 비해 지지 기반도 대폭 넓어졌으며, 더욱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과 에티오피아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의 테러 연계 가능성은 도리어 커졌다’고 밝혔다.
- 미국의 파상공세에 파키스탄 국경지대까지 쫓겨 갔던 탈레반이 남부 헬만드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힌 것처럼, 모가디슈에서 쫓겨 갔던 이슬람법정연맹은 소말리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정비해 다시 모가디슈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에티오피아의 침략과 점령이 소말리아 전역에서 저항 세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해적도, 저항 세력의 성장도 막지 못한 채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은 소말리아라는 늪에 빠져들고 있다.

### 3-4. 파병의 근거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13240)을 제출하면서 파병의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73, 1838, 1846, 1851호를 제시했다.
- 결의안 1838호와 1846호, 1851호는 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무력 사용, 영토 상륙작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영구적인 허용이 아니라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기 결의안의 기한은 2009년 말까지다. 따라서 2011년 파견연장 동의안의 파병의 근거로서는 부적절하다.
- 물론 안보리 결의안 1897호(2009.11.30), 1950호(2010.11.23), 2020호(2011.11.22)를 통해 그 기한이 12개월씩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그러나 기한 연장의 근거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소말리아 지역 일부에서만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도정부의 요청이 소말리아 전체 영해와 영토에서의 무력 사용의 근거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 \*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2012년 8월 20일, 새 정부를 수립해 현재는 ‘소말리아 공화국’이 소말리아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슬람 부족의 세력권, 자치 지역인 소말리랜드, 군벌의 영향력 하에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치외/중립 지역 등 소말리아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 또한 반군 및 테러리스트 소탕을 빌미로 수차례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평화회담을 어렵게 만든 미국의 행위는 명백한 침략 행위다. 청해부대 및 개인단위 파병의 활동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1항에 위배된다.

[표 6] 소말리아 해적 관련 주요 UN 안보리 결의안

번호	채택일자	주요내용
1816	2008.6.2	△ 해적퇴치 위해 6개월간 외국 공권력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무력 사용 허용 △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형사관할권 관련 국가간 협력
1838	2008.10.7	△ 소말리아에 인도적 지원 시급 △ UN 회원국들의 공군과 해군 동원 요청 △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협력 강조
1846	2008.12.2	△ 무력사용 결의안 1816에서 정한 영해 진입 기한을 추가로 12개월 연장 △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무기와 군사 장비 지원해줄 것을 요청
1851	2008.12.16	△ 소말리아 영토 상륙작전 가능성 인정 △ 소말리아 해적 관련 정보를 공유, 조정하기 위해 해적 정보센터 제안
1897	2009.11.30	△ 1846호와 1851호의 내용을 12개월 연장
1918	2010.4.27	△ 해적 관련 재판을 실시할 국내 또는 국제법정과 해적을 수감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UN 사무총장에 요청

### 3-5.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는 개인단위 파병

#### ○ 개인단위 파병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소말리아의 개인파병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12년도 예산에는 개인파병을 위해 1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개인파병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
- 국방부는 개인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병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 파병 동의권은 파병규모나 안전 등과 무관하게 모든 파병활동에 대해 부여된 권한이므로 국방부가 임의로 국회 동의 없이 개인파병을 운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파병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것이다.

[표 7] 개인파병 국가별 운영현황(단위: 명)

	국가/임무단	파병인원	
		2010	2011(8월 말 기준)
다국적군 파병	미국	3	3
	아프가니스탄	7	4
	바레인	3	5
	지부티	4	4
PKO 파병	인도/파키스탄	9	8
	네팔	4	0
	수단	9	8
	라이베리아	2	2
	코트디부아르	2	2
	서부사하라	2	4
	레바논	10	10
	아이티	2	2
	아비에이 평화유지군	0	1
합계	57	53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1.10.

### 3-6. 부적절한 예산 운용

[표 8] 소말리아 파병부대 예산 (단위: 억 원)

연도	소말리아 청해부대
2009년	284
2010년	342
소계	626

※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

○ 파병에 따른 비용 추계가 부적절하다

- 2011 회계연도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파병연장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57% 증가한 파병활동 비용 추계를 제출했다.

[표 9] 2011 회계연도 소말리아 파병활동 결산 내역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3 (21,236)	96	0 (-11)	0	21,335	21,161	17	156

※ 출처: 국방부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표 10] 2012년 소말리아 파병활동 비용 추계 (단위: 백만 원)

구분	해외파견 근무수당	증식/피복 비	유류비	장비/물자 획득	기타 부대 운영비	계
비용	12,490	2,247	13,345	1,931	3,395	33,408

※ 출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13240)

○ 파병부대 예산은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월되고 있다

-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은 1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파병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파병 동의 권한을 침해한다.

#### 4. 결론

- 지난 해 4월에 피랍된 제미니호의 한국 선원 4명이 500일이 넘는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사망한 해적들과 체포된 해적들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의 주장은 협상금을 올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며,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정통한 케냐의 한 언론인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적 부족끼리 한국 인질을 놓고 총격전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미니호의 한국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는 해적의 일원이라고 주장한 소말리아인은 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한국 선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고 밝혔다.
-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공격적인 군사작전이 한국인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 해적 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군 파병을 통한 해적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다. 다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통해 해적을 소탕한 한국이나 인도 선원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되고, 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부르고 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관용 원칙만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현재 피랍된 한국 선원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 소말리아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을 도우면서 소말리아의 안정을 파괴해 소말리아를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들고 있다.
-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해역보다 이른 1990년대부터 해적문제가 심각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의 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최근 들어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오랜 기간의 내전과 외국 상선의 불법 조업, 폐기물 투기로 파탄난 소말리아의 경제를 재건해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 단기적으로는 국제해사기구가 제안하는 '해적 행위 예방 및 억제 지침'에 따라 선사와 선박들이 미리 대비한다면 상당부분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은 결코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점점 더 깊숙이 말려들 뿐이다. 소말리아 파병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